
	보도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보도일시	2021. 9. 17.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 : 2021. 9. 16.(목) 정오 12:00 이후		총 9쪽 (붙임 2쪽 포함)
배포일시	2021. 9. 16.(목)	담당부서	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
담당과장	박정애 (02-2100-6171)	담당자	전진희 사무관(02-2100-6178) 주리나 주무관(02-2100-6180)

인공지능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생ن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윤리 기준 마련 필요

-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제2차 정책 개선 권고 -

- 인공지능, 전문체육, 학교폭력, 국제결혼,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 10개 분야 정책 개선 권고
-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*, 10개 주요정책*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.

* ①인공지능(AI)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, ②전문체육 분야, ③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, ④자살예방정책, ⑤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, ⑥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, ⑦노사관계 지원정책, ⑧코로나19 대응 정책, ⑨국제결혼 지원 사업, ⑩생활체감형 정책

● **특정성별영향평가** :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하고,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(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, 제11조)

-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,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
- 이번 대상과제별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인공지능(AI)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개선권고

- 인공지능(AI)의 확산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나,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 발생뿐만 아니라,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 또한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- *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여성비율은 19.1%이며, 인공지능 사업 추진 기업 대표자 여성 비율은 3.1%에 불과. 인공지능 챗봇('이루다')의 여성·장애인 혐오 발언 등 논란 발생
- 이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·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,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,
 - 인공지능 분야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.

2. 전문체육 분야 정책 개선권고

- 근래 전문체육 분야* 성폭력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체육계 성차별 관행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미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, 여성 선수의 권익 보장 등 전문 체육 분야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* 전문체육 :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(국민체육진흥법 제2조)
 - ※ 프로 선수 중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15.9%이며,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37.7%로 남성 응답자 중의 5.8%에 비해 6.5배 높았음(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, (사)한국프로스포츠협회 김동식 등, 2019)
- 이에 전문체육 분야의 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성평등 지표 개발을 통해 조사 및 공표하고, 전문체육인을 활용한 스포츠인권전문가를 양성하며, 전문체육 지도자 등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,
 - 전문체육 관련 스포츠 단체의 임원과 지도자 영역에서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.

3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개선권고

- 최근 학교폭력은 사이버 폭력 및 집단 따돌림·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높아지며 이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, 여성 청소년의 사이버 피해 비중이 남성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성별 차이가 있으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 통계의 생산과 관리 및 관련 정책 추진에서 성인지적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* 청소년 폭력 경험자 중 '온라인(인터넷)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'20) : (남) 24.9%, (여) 29.1% (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, 여성가족부)
 - *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후 우울·불안·스트레스 경험 : (남) 11.3%, (여) 31.3% (2019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, 방송통신위원회)
- 이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학교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등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,
 -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성별 및 피해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사후 조치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.

4. 자살예방정책 개선권고

- 최근 20·30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 현황을 보면 성별 차이가 있어,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성별 내 연령별·직종별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, 자살 생각과 시도 단계부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* 20대 자살 시도자 수 : ('15) (남 2,116명 (여) 2,751명 → ('19) (남 3,061명(44.7% 증), (여) 5,671명(106.1% 증)
<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>
- 이에 20·30 여성 대상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자살위험 검진도구를 개발하고, 성별 내 연령 및 직종 등 집단 특성과 자살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교육자료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,
 - 성별 내 연령별·직종별 찾아가는 상담과 교육, 자조모임 활성화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.

5.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개선권고

- 해양전문인력(해기사)은 주로 남성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이 쉽지 않고, 여성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고충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* 해양대학교 여성 졸업자 승선 취업률은 10~20% 안팎으로 졸업 후 실제 승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움
- 이에 업종별·직책별 승선 인력 및 이직 현황 등 성별 분리 통계 생산·관리, 여성 해양전문인력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선박 승선실습 기회 확대,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산업 스마트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설·확대 등 해양전문인력 분야 여성인력 양성·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.

6.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개선권고

-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, 남성 취득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, 특히, 기술사·기능장 등 고수준 자격 취득 현황에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어, 국가기술자격 취득에서 자격유형, 등급에 따라 발생하는 성별 격차 완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*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(20년) : 715,902명(남 62.2%, 여 37.8%)
 - * 기술사/기능장 취득자 비율(20년) : (기술사) (남) 93.4% (여) 6.6% / (기능장) (남) 95.4% (여) 4.6% (21년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)
- 이에 국가기술자격 중장기 기본계획 내 성별 균형 참여 제고를 위한 전략을 반영하고 여성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수요가 많은 자격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종목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권고하였다.

7. 노사관계 지원 정책 개선권고

- 노사관계 지원정책은 노사자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나, 노사관계 내 성별 현황 관리 미흡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균형 참여 저조 등 성평등한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* 노조 가입률 : ('19) 남성 14.6% 여성 9.4% ('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재분석)
 - ** 노사협의회 여성 참여율은 약 15~28% 범위에 불과, 사용자위원 중 여성 비율은 15~16% 인פק, 노동자위원 여성 비율도 25~27% 수준(3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기업별 단위노조 지부 지회 설문조사 결과, 20년)
 - *** (해외사례) (프랑스) 기업 내 사회경제위원회(CSE) 위원 선출 시 성희롱 및 성차별 문제를 전담하는 위원을 최소 1인 이상 정하도록 규정, (독일) 사업장 전체 성별구조 감안하여 소수 성별의 경우 그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대표 위원 수를 정하도록 규정
- 이에 노사협의회 등 협의 기구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마련하고,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 통계 내 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,
 - 노사관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이 여성조합원 역량 강화 및 여성노동자 대상 교육·홍보 등 성평등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.

8. 코로나19 대응 정책 개선권고

- 코로나19가 사회·경제적 위기를 초래하였으며, 특히 여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, 이와 관련된 일자리·돌봄·여성폭력 관련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* 전년대비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상위 업종은 대면업종으로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, 교육서비스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총 583천 명 감소, 이 중 여성 58.5% (△341천 명) 남성 41.5%(△242천 명)('20.9월 기준,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)
 - * '20.2월 대비 3월 방문요양 활동인원 감소율이 3.0%로 가장 높았음(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)
 - * 가정폭력 관련 사이버상담 : ('18) 3,092건 → ('19) 10,912건 → ('20) 12,203건 (여성가족부 통계)

- 이에 일자리 분야 개선을 위해,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대상 모니터링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을 확대하고, 성차별적 고용조정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, 여성노동자 재취업·전직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.
- 또한, 돌봄 분야 관련하여, 코로나19 등 재난 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인력 운영 및 방역물품 공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, 방문돌봄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으며,
-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특성을 고려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세부 대응지침과 함께 감염병 시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권고하였다.

9. 국제결혼 지원사업 개선권고

-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, 지역 인구 유출 감소, 출산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 및 사업을 운영 중이나, 그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바람직한 다문화 지원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제정·시행 지자체는 44개 지역, 국제결혼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23개 지역에서 운영

- 이에, 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이라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려 국제결혼 과정에 대한 일회성 비용 지원을 지양하고 결혼 이후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지원 등을 위한 방향으로 조례 및 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하였다.

10. 생활체감형 정책 개선권고

-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가·교훈에 대해 성차별적 요소를 자율 점검하고,
 - 지방자치단체 정책 홍보물 제작 시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 한편, 국내 자동음성안내(ARS) 운영 시 성별 다양성이 제고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.
-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“인공지능(AI) 분야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양성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라며,
 - “특히, 정부 주요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기획·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, 그 효과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【붙임】 1. 대상과제별 정책 개선 권고(2차) 주요 내용
2.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



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붙임 1

대상과제별 정책 개선 권고(2차) 주요 내용

연번	대상정책명	개선권고(안) 주요내용	소관부처
1	인공지능(AI)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	-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실태 파악, 한국사회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대상별·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개발 보급 등	과학기술정보통신부·교육부
2	전문체육 분야	- 전문체육 분야 성별 통계 생산·관리 및 전문체육 분야 여성 선수들의 건강 대응 역량 제고, 스포츠 윤리센터 전문성 함양 방안 마련 등	문화체육관광부
3	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	-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성폭력 피해 지원 관련 전문가 참여 방안 및 학교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강화 방안 마련 등	교육부·
4	자살예방정책	- 2030 여성 대상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자살위험 검진도구 개발, 일반국민 대상 성별 내 연령별, 직종별 등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등	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
5	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	- 해양 전문인력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생산 및 현황관리, 해양전문인력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강화 등	해양수산부, 교육부
6	국가기술 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	-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교육·훈련 및 고용 연계지원 강화, 국가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계획 내 양성평등 제고 방안 포함 등	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
7	노사관계 지원정책	- 노사협의회 등 협의 기구 성별 균형 참여, 노사관계 지원사업 내 성평등 관련 내용 포함,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사업 내 성평등 관련 인식 제고 등	고용노동부
8	코로나 대응 정책	- 코로나19 시기의 일자리·돌봄·가정폭력 영역에 나타나는 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 개선안 제시 *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기 시 취약 노동자에 대한 소득 지원 강화, 성차별적 고용조정 방지 등을 위한 대책 강화,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여성노동자 재취업·전직 지원 강화, 방역물품 공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물품 수요 파악 및 서비스기관 내 물품 구비 권고 등 조치, 재난 등의 위기상황 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등	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
9	국제결혼 지원사업	- 국제결혼 이후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양성평등 방향으로 조례 내용 정비, 일회성·시혜성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전환 등	지방자치단체
10	생활체감형 정책	-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성차별 문제를 찾아내어 정부나 공공 기관이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1) 교가·교훈의 성차별적 요소 자율 점검 추진 2)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제작 시 양성평등 관점 제고 3) 자동음성안내(ARS) 등 특정 서비스 분야의 성별 다양성 제고	1) 교육부·교육청 2) 지방자치단체 3)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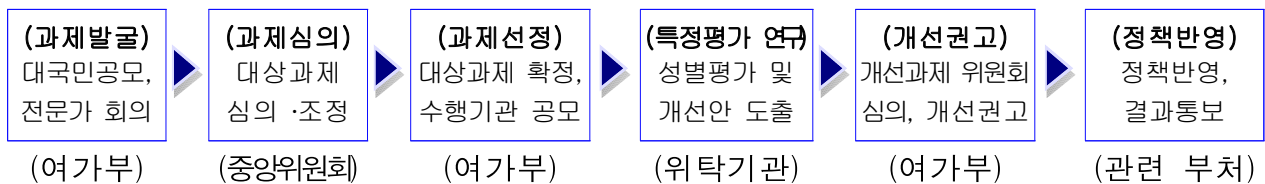


□ 제도개요

-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분석·평가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

* (추진근거)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- '12년부터 '20년까지 고용·일자리, 보건·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총 78 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총 399개 과제에 대해 개선 권고



□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개요

- (추진경과) 대국민공모,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대상과제 선정하고, 정책별 전문가 분석·평가를 통해 개선과제(안) 도출

<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현황 >

주요정책	· 환경보건 종합계획	·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
	·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	· 전문체육 분야 정책
	· 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	·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정책
	· 노사관계 지원 정책	· 자살예방정책
	· 국제결혼지원사업	· 코로나 대응 정책
	· 인공지능(AI)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	
	생활 체감형 정책	· 학교 교가·교훈, 지방자치단체 홍보물, 자동음성안내 서비스

* 환경보건 종합계획,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개선권고('21.5월)